

전남 섬 지역에 드론 택배 뜬다

‘배송점’ 개발... 고흥 득량·진지도 시범 사업 내년부터 정기항로 없는 86개 도서 확산 추진

전남도가 여객선 정기항로가 없는 유인도서에서 드론(무인항공기) 택배배달이 가능한 기반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주소만 입력하면 드론이 알아서 배달해주는 ‘드론 자율 배송점’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드론 자율 배송점은 우편이나 택배, 각종 배달을 할 때 도로명주소만 입력하면 드론이 스스로 비행하면서 위치를 찾고 사용자가 요구한 지점에 자동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자동차 자율주행과 비슷한 개념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고흥 득량도와 진지도 등 정기항로가 없는 유인도서 2곳에 대해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섬이 많은 전남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물류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산간지역의 보편적 우편·택배 서비스 실현, 재난이나 폭설 등으로 인한 재해지역에 긴급구호물품 배달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배송점은 행안부와 전남도, 학계, 드론

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육상이 아닌 지붕구조로 돼 있거나, 마당 등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의 경우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단형 배송점을 개발한다.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해 이동이 가능한 배송점도 개발한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전남도내 279개 유인도 중 현재 정기항로가 없는 86개(31%) 도서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자율드론 배송점 개발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주소 정보의 가치와 활용을 향상시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6·13 지방선거 레이다 D-8



이용섭, ‘광주행복 1번가’ 폭발적 관심 눈길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진행 중인 온라인 접수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가 한 달만에 500건 가까이 접수되는 등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이용섭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달 8일 개통한 이후 이날까지 480여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

이날까지 ‘광주행복 1번가’에 접수된 분야별 사항으로는 복지환경이 29%로 가장 많았

고, 교통문제 25%, 도시개발 18%, 행정개선 16%, 관광문화 12% 등 순이었다.

이 후보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불편 사항과 정책들은 광주시장에 당선이 되면 취임 100일안에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시청, 5개 구청, 경찰청, 소방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불편해소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전덕영 “전통시장, 명품시장으로 육성”

전덕영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후보는 4일 광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말바우시장, 남광주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을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는 이날 시내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육성을 총괄하는 시장 직속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를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밝혔

다.

전 후보는 “이를 통해 1913송정역시장,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처럼 광주 17개 전통시장이 저마다 역사성과 특색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것이다”며 “ICT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 상권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경영·마케팅·상인역량강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민호, ‘비행장소음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장 후보는 4일 “광주 공항 소음피해 주민배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항전투비행장 2차 소음피해 소송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후보는 “법원은 전투비행장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것이다”며

“하지만 배상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소음피해 주민 모두에게 배상하는 ‘전투기소음피해배상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전투비행에 따른 소음피해를 국가가 배상한다는 법원판결은 전투비행이 위법하다는 의미다. 공항이 이전될 때까지 전투비행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김영록 “‘전남페이’·지역상품권 도입”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4일 카드수수료 없는 ‘고향사랑 전남페이’(J-pay)를 도입하고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을 통해 고품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과도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VAN)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전남페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전남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전남 새천년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기존 은누리상품권의 한계를 보완한 전남 새천년 상품권을 연간 2,500억원어치 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5%인 125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5% 할인된 전남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토록 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이정선 “해외대학 가는 IB교육과정 도입”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4일 “광주학생들도 해외우수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국제공인 ‘IB교육과정’을 검토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교육과정은 전 세계 4,0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국제공인 교육방식이다”며 “IB교육과정은 주입식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결과중심 평가

에서 벗어나 수행평가와 토론·논술을 바탕으로 한 과정중심 평가로 혁신해가는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IB교육과정 도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우리 광주 학생들이 타지역에 뒤처지지 않고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주 학생들이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대학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기적의 놀이도서관 개관하겠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4일 “기적의 놀이도서관을 개관하겠다”고 밝혔다.

‘기적의 놀이 도서관’은 변화하는 대학입시체제에 대응하는 맞춤형 학습공간으로 운영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진로설계 공간, 인문문화예술 토론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 후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기적의 놀이도서관’을 개관해 우리 아이들의 방과후와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아이들이 인문·문화·예술 도서를 읽으며 과정중심·학생중심 토론을 진행하고, 독서가 놀이로 변모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석용 “공·사립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

장석용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4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차별없는 교육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차별없는 교육지원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평등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와 협의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현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

장 후보는 “교원의 처우개선과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의 역량강화를 통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에 앞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제도적 조정을 정비하고, 사후에 관리감독에 소중환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도, 스마트 농업 육성 4천억원 투입

2022년까지 스마트팜 기반사업 추진

전남도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4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스마트농업위원회를 열어 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지능형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한 미래농업을 선도한다는 비전 아래 사물

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드론 등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육성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첨단기술 개발·보급, 스마트팜 기반구축, 전문기술 인력양성 등 3개 분야, 39개 사업에 4,055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스마트농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지난 1월 마무리했다.

이어 국내외 스마트농업 추진실태와 우수사례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 뒤 전문가 자문, 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확정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 부원장은 “전국 최초로 스마트농업 육성조례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전남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근산 기자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 윤장현 광주시장이 4일 오후 북구 광주교통문화연구소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 투표소 접근성·편의시설 개선

시, 노후건물 42곳 대상 모니터링 실시 임시경사로·안내요원 배치 등 추가보완

광주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민·관 합동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 결과,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든 출입구 경사로와 좁은 출입문,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등 일부 투표소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단체, 시민인권실천단과 함께 총 364개 투표소 중 노후건물·

사회약자들이 투표하는데 문제가 예상되는 42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광주시와 선관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22개 투표소 중 7곳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15곳은 임시경사로 설치, 안내요원 배치 등 투표일 이전까지 보완할 방침이다.

지하나 지상2층 이상 투표소에는 대부분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만 설치되지 않은 사전투표소 서구 양3동 주민센터는 선관위에서 당일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

치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장애인들이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출입문이 좁은 남구 주월2동 봉주경로당은 임시로 문을 제거해 전동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북구 우산동 효곡우체국 등 투표소 6곳은 인근 건물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마쳤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소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요소를 사전 제거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했다”며 “앞으로도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기관과 일반시민들까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1면 ‘광주형 일자리’ 서 계속

이날 정중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시 협상단도 현대차 본사를 방문해 투자규모, 생산 차종과 규모, 위탁기간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설립 방안과 이사회 규모, 지분투자 규모, 유관기업 유치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는 투자협약 체결, 법적검토, 투자기간, 기업모집, 합

작법인 설립, 공장 착공 등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한다.

현대차 실사단과 광주시 협상단이 서로 교차방문을 하면서 현대차의 투자의향서 제출로 시작된 광주 완성차공장 설립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의 참여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 노조 반발 등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이끌어낼 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대차 실무진의

현장실사를 계기로 여러 가지 투자조건에 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시일 내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공장이 설립되면 오는 2020~2021년께 현재 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절반수준인 약 4,000만원으로 연간 10만대 현대차를 위탁·생산하게 되며, 광주시는 1만2,000여명에 달하는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